

대통령기념관, 기록관, 그리고 도서관

- 이제 도서관인의 의지를 모으자 -

최 정 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99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대통령의 서거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의 묘소에는 국내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그의 생가에는 수 천명의 추모객들이 운집하여 찬양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앞장서서 국고의 지원으로 '박정희기념관'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어디에 인지 그의 기념관은 조만간 설립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념관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나 사건을 추모하면서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고 몇몇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이들을 위하여 기념관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인 듯 하다. 왜 박정희를 위하여 기념관을 만들어야 하는가. "박정희는 군사문화를 우리 사회에 고착시킨 장본인으로서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세계 속의 유래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하면서 "기념관설립은 현 정권이 야합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9.10.26.)고 역사학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그의 기념관 설립을 확정하고, 국고지원을 결정한 마당이니 설립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명칭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기념관' 이어야 하는가. '기록관' 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단계 발전하여 '도서관' 이라고 하면 어떤가.

지금 정부와 지역단체에서는 기능과 성격을 기

념관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의 모임과 일부 언론의 시각은 기록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9.10.27. : 역사학자모임 "박정희기념관 대신 대통령기록관으로 짓자")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의 권영빈은 그의 칼럼에서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오역(誤譯)하면서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형을 연립주택형으로 취하자고 코미디화 하고 있다(중앙일보, 1999. 10. 29. : 권영빈칼럼 "기념관인가 기록관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건물의 명칭과 성격을 '대통령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신문, 1999.11. 16. : 최정태, <논단> "박정희 도서관을 생각하자") 한국에서는 아직 이와 유사한 제도도, 전례도 없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제 것으로 친다. 그 명칭 자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성격과 기능을 들어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려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직업군들이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다.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자체가 어찌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지가 걱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명분과 욕심이야 어떻든 분명한 요체는 이 기구가 완성되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기분에서 (일차적으로 100억원 국고지원을 한다기에) 그 돈을 제대로, 정직하게 쓰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국민과 친화적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기념관(memorial hall)은 성격상 박물관적 요소가 강하다. 여기에 비치되는 수장품(museum piece)은 개인 숭배를 위한 상징적 전시물이 주로 차지한다. 창이 없고 답답한 공간 속에 박제된 물품이 유리창을 통해 전시될 뿐이다. 그리고 여기를 찾는 이용자 수준도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아니면, 그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온 단체관광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다음, 기록관(archives)일 경우, 그 성격은 문서관, 또는 기록보존소, 문서보관소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곳에서는 기록물을 이용한다기에 보다 오래 상하지 않게끔 닫힌 공간에서 보존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어, 일부 관심있는 학자와 연구자 그리고 좁은 범위의 이용자로 한정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도 기념관의 성격을 보완하여 박물관 자료까지 비치한다면 이용자는 다소 늘어나겠지만 역시 효율성 및 국민친화력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주장하는 대안은 위 두 가지 안의 내용을 충족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명칭문제를 해소하며, 또한 기념관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도서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에 대하여 자료도 모으고, 또한 현지에서 조사를 한 일도 있다.(최정태, 주희경.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9)참조)

미국에는 현재 10개의 대통령도서관과 1개 닉슨 프로젝트가 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도 대통령의 핵심자료가 개인의 사유물로 멸실되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모든 기

록물을 연방정부에 기증하고 부터 대통령도서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타워가 우뚝 서 있고, 같은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노예해방을 주도한 에버러햄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상징물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지역단체가 한시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된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과 1968년 개정된 '기증품제한기준'에 따라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대통령도서관 설립에 대한 비용을 국고의 지원이 없이 당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금하거나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조성하지만,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서는 순간 그의 모든 자료는 연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이 재임 시 못다한 일을 퇴임 후, 도서관을 통하여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장치로서, 주민과 대화하고, 국민과의 가교를 설정하는 열린공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7년 11월 부시대통령이 그의 고향 텍사스A&M대학에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고, 현재 클린턴대통령도 알칸소, 리틀록에 도서관부지를 물색중이라 한다.

그러나 닉슨은 재임시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한 불명예 퇴임으로 인해, 모든 대통령이 누리려는 그의 독자적인 '도서관' 명칭과 개인적 설립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의 자료는 아직도

‘닉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D.C.의 국립기록보존소(NARA)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단순히 기념비적 전시물과 개인승배를 위한 박제된 자료만을 비치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의 시대와 관련되는 통치자료만을 갖추는 기록관(archives)도 아니다. 그곳은 대통령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보존소를 겸하여 연구센터이자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는 일종의 ‘특수도서관’이다(<http://goper.nara.gov> : Mission and background of the presidential library system). 여기에 도서와 문서를 함께 수집하고, 당해 대통령의 통치자료와 파일 및 국내 외의 그의 관련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며, 동시에 주민의 ‘열린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도서관문화’가 정착되어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유치원에서까지 ‘Library Song’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원생부터 대통령까지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미국 국민의 정서인 것 같다.

사실, 미국 부시도서관을 찾으면 부시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나는 학술적 활동인으로… 도서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대학 위탁에 관해 기쁨을 느낀다. 대통령도서관은 단지 벽돌과 모르타르에 의한 건물이 아닌 앞으로의 도서관의 학술적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명백한 지시를 내렸다”고 천명한테 대하여, “부시 내외는 도서관의 강한 지지자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지원을 했다. 이 시설물은 언젠가 미래세대 그룹멤버들이 리써치를 하게되어, ‘교육적대통령’의 명칭이 주어질 것이란 점을 믿어 의

심치 않는다.”라고 NARA의 공식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http://www.nara.gov/nara/president/overview.html>: Bush Presidential Library of NARA).

한편, 바바라 부시여사도 도서관과 관련되는 ‘가정독서클럽’(Family Reading Tips)을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어 부시도서관을 찾는 이마다 전단(leaflet)을 나누어주며 ‘어린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수행하는 일은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책읽기 운동’으로 “왜 같이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밝힌다.

즉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쉽게 배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들의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어휘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책을 더 많이 읽어 주면 나중에 스스로 독서할 때 그 지식이 유용히 쓰인다. 책을 읽어주면 대화의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독서가 우리 가정에서 가치있는 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독서전문가의 말을 빌어 일깨워주고 있다.

더하여 “함께 소리내어 읽기 비결”에 관한 9가지 수칙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만들어라. ②함께 읽는 시간을 별도로 내어라. ③효율적 책읽기의 몇가지 방법, 예컨대 -책읽을 때 글자에 손가락이 따라간다.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게 한다. 등등 ④아이를 돌보는 사람한테도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한다. ⑤도서관을 정례적으로 찾도록 한다. ⑥독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라. ⑦모든 것이 읽을거리다. 요리책, 통신판매 카타로그, … 신문 등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책을 읽는것 만이 독서는 아니다. 책을 선택할 때 어

린이문학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라. 사서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⑧집에서 독서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라. ⑨아이가 책을 읽을 줄 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어 주라.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부인이 몸소 가르친다. 나는 이러한 현장을 보고 미국의 국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미 국고지원을 결정하였다면 기념관의 형태를 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독서운동'도 하고 다양한 정보봉사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제된 공간으로서 기념관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학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록관으로서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지금같이 열악한 한국의 도서관 사정에서 '대통령도서관'은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국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으며, 요즘 야기되고 있는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관 논쟁'도 극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온 국민에게 친화력을 주고 전임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념관과 박물관 그리고 기록관의 복합개념을 가진 특수도서관을 마련하여 학자의 연구 산실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정보 제공처 구실과 더불어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론통일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특정 정권의 정략적 차원이나, 특정지역의 정실에서 맴도는 일회성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YSD, 앞으로 DJ도 그의 출생지나 출생학교에 대통령 도서관을 만들어 그가 평생 모아온 그의 장서를 수장하고, 재임시 생산된 통치자료를 비치하여, 여기에도 기록보존소 기능을 주어 관리와 이용을 행하게 한다.

따라서 관심 있는 연구자나 전문가는 모두 이곳을 찾도록 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그에 관한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장소, 즉 역사를 만드는 학술연구센터로 활용하면 어떨까. 동시에 통치 시 수집된 관련 기념물과 함께 그와 그의 가족이 국내외 귀빈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등을 전시, 관람토록 하는 기념관 기능을 줌으로써 세 가지의 역할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아마도 이러한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 땅에는 자랑스러운 특수서관이 새로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다음 대통령에 이어져 계속 훌륭한 업적을 남기려 좋은 정치를 베풀 것이며, 그 자리는 한국의 명소가 되어 국민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이 다 함께 바길 수 있는 '대통령도서관'의 건립운동을 우리 도서관인 모두가 의지를 모아 그들을 계몽하고 설득시켜 보자. 이제是我们도 당당히 나서서 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바로잡음 —

도서관문화 Vol.40 No.4(1999년 7·8월호) 16쪽
[표3]의 5행 2열의 '48.64%'를 '36.34%'로 바로 잡습니다.